

광주 금당산 불법 경작 기승… 시민 불편 호소

진입로 주변 침수곳서 작물 재배
거름·비료 살포 악취·폐기물 투기
아파트 옹벽 토사 유출피해 우려
“지자체, 민원에 소극 대응” 비판
남구 “행정대집행 등 원천 봉쇄”

광주 남구 금당산 진입로 일대에서 장기간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에는 과거 민원이 제기됐지만, 강제 철거나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구는 경작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불법 경작을 원천 봉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찾은 광주 남구 진월동 금당산 일대. 진입로에 들어서자 나무패널과 나뭇가지 등으로 일기설기 경계를 지어놓은 경작지가 눈에 띄었다.

이곳에는 상추와 고추, 호박 등 각종 작물이 자라고 있었으며, 일부 구역을 지날 때는 거름과 비료를 뿌린 지 얼마 안 된 듯 강한 악취가 났다. 펄트병과 양동이, 찢어진 현수막 등 폐기물이 곳곳에 나뒹굴기도 했다.

이러한 경작지는 침수 곳으로 산책로를 따라서 수백 m 이상 이어졌다. 경작지와 맞닿은 옹벽 밑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지반이 무너질 경우 인명피해 발생도 우려됐다.



최근 찾은 광주 남구 진월동 금당산 진입로 일대의 남구 구유지에서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 일대 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한 결과, 상당부분은 남구의 구유지이고, 일부는 호반건설의 사유지로 몇몇 시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해 농사를 짓는 불법 경작지로 확인됐다.

실제로 불법 경작지 주변으로는 남구청의 계고장과 안내문 등이 게시돼 있었다. 하지만 남구가 예고한 철거 날짜가 이미 7년 가까이 지나 있는 등 계고장의 실효성

은 없어 보였다.

계고장에는 ‘당해 토지는 남구의 구유지로 일체의 무단 경작 및 점용 행위를 금지한다’, ‘2017년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미진행 시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 지속 무단 경작 시 고발 조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당산 진입로 일대에서 오랜 기간 기승을 부리는 불법 경작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도 심화하고 있다.

박성명(67)씨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여러 명의 불법 경작자들이 주말 사이 농작물을 수거하고 삽으로 옹벽을 파는 등 경작지를 넓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노후화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지 않나. 여차하면 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나애순(73)씨도 “이곳에서 불법 경작이 이뤄진 지 십수 년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등산로 주변으로 계속해서 각종 폐기물과 적치물 등이 쌓여 흉물스럽다”며 “거름 등으로 인한 악취도 심하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토사 등이 유출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남구에서도 강제 철거하겠다고 계고문을 부착한 지도 하세월이다”며 “왜 철거하지 않고 수년째 방치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구는 불법 경작지라도 농작물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 경작지 농산물의 경우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강제로 철거할 시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경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강제철거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부착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3차례 계고한 뒤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경작지를 갈아엎을 계획이다”면서 “불법 경작지로 이용된 장소에 나무를 심는 등 불법 경작을 원천 봉쇄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inilbo.com

사업자금 빌미로 4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지인들에게 4억여원을 갈취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 농산물 유통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농산물 유통 사업자였던 A씨는 거래처 지인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4억8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숙자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6일 술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광주 한 지구대에 방문했다가 지명수배 중이던 사실이 들롱나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8일 법원의로부터 발부받았다.

정상아 기자

전남, 실종자 배회감지기 이용률 전국 최하위권

치매 환자 신속한 발견 장치
0.9%로 전국서 4번째로 낮아

전남에서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돕는 배회감지기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지난해 전국에서 1만 4677건이었다. 지난 2019년 접수된 1만

2131건보다 21.0% 늘어난 수치다.

실종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지난해 8.2시간으로 2019년 8.0시간보다 길어졌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83건이었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내장돼 치매 환자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추적,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설정해 둔 권역을 벗어나면 보호자 알림, 위기 상황 긴급호출 알림 등이 전송돼 실종 치매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중요한 장치지만, 지역 내 이용률은 매

우 낮은 실정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1.1%로 전국 평균인 2.9%에 크게 못 미쳤고 올해는 6월 기준 0.9%로 제주(0.2), 세종(0.7%), 대구(0.8%)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배회감지기 보급률 4.2%를 기록했지만, 올해 보급률은 2.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치매 환자 실종은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 실종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신속한 발견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배회감지기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